

국가간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헌섭*

<요 약>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주제어 : 조세순응, 조세윤리, 문화적 요소

논문접수일 : 2009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4월 2일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hschoi@hongik.ac.kr

† 본 연구는 홍익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세수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07년 22.7% 수준으로 2000년대 들어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조세부담률이 증가하여 국민부담률은 2007년 28.6% 수준으로 예상되며 미국, 일본 등의 27.3%, 27.4%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조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의 공평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조세의 공평이란 각양각색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²⁾,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³⁾, 최근에는 세대간 공평성 문제도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금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 문제와 근로소득자간 높은 면세비율로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근로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을 불러와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세정책 방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탈세문제는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수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벌위주의 정책수단이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제안되었지만 납세자의 탈세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방안으로 처벌위주의 정책수단에서 성실납부에 대한 유인책을 정책수단으로 제안하는 연구들이 제기 되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유인정책 수단들이 처벌위주의 정책수단들에 비해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데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Falkinger & Walther 1991). 납세순응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처벌위주의 정책과 유인정책인 비경제적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납세순응행위에 대하여 미진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2) 수평적 공평은 조세의 부담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액수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수직적 공평은 부담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부담능력을 소득으로 측정한다고 할 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에 대한 세액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a rising ratio of tax to income)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납세순응행위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동향으로 조세윤리(tax morale)와 조세문화(tax culture)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세윤리(tax morale)는 국민들이 좀 더 성실하도록 행동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조세순응정도를 높이게 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이다(Feld and Frey, 2002). 한편 조세문화(tax culture)는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하는 조세환경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세문화는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세제도 및 행정과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단체들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Nerre 2001). 이러한 조세문화는 해당 국가만의 고유한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간 조세저항과 조세순응(tax compliance)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폭 넓게 진행되어 왔으나 실증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적인 요인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동향 및 조세윤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고찰하고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며 V장에서는 결론으로 구성된다.

II. 선행연구

조세순응은 이론적 관점에서 일반적 억제이론(general deterrence theory)과 경제적 억제모델(economic deterrence models) 그리고 재정적 심리(fiscal psychology)에 관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일반적인 의미는 조세회피(tax noncompliance)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억제되거나 또는 불확실성하에서 순수한 경제적 의사결정으로 모델화하거나(Allingham and Sandmo 1972) 또는 조세순응에 대한 인구, 태도, 인지 등의 비경제적 요인과 같은 결과 일수

도 있다(Kinsey 1986). 그러나 조세탈루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세 가지 이론과 관련한 연구들은 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고(Alm, McClelland and Schulze 1992) 그리고 조세회피 예측에 관하여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Andreoni 등 1998). 실제로 조세회피는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라마다 지하경제라는 좋은 예가 있다(Cowell 1990).

한편 Feld and Frey (2002)는 조세윤리(tax morale)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Graetz and Wilde(1985)는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의 조세순응 측정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높은 조세순응률은 시민의 식과 준법정신 또는 조세회피 기회의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중요성을 잃었을 때 윤리수준은 문제가 발생되며 윤리의식의 침해는 결과적으로 조세순응률을 낮추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Nerre(2001)는 조세문화(tax culture)는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하는 조세환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학계, 세무공무원, 전문가, 납세자 등의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공식·비공식적 단체들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화는 해당 국가만의 고유한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세문화는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orgler(2004)는 아시아 국가들의 조세윤리를 연구하였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필리핀, 한국, 대만은 조세윤리의 수준이 낮으며 반면에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조세윤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윤리는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 할 수 있으나 조세윤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성, 법적 시스템, 공무원에 대한 만족, 민주화의 수준, 국가적 자부심 등을 들고 있다. Belkaoui(2004)는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자유도, 주식시장의 중요성, 경쟁법의 효율성은 조세순응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범죄율은 음(-)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ofstede(1980,1991)는 64개국 IBM직원을 대상으로 작업관련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차원측정을 개발하여 문화모형을 측정하였다. 문화적 가치요소는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집단주의, 남성위주, 장기적 관점으로 구성된다. 이 문화모형에 의하면 사회는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영향은 정보를 활용하는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조용언(2000)은 Hofstede의 5개 문화차원이 국제조세분야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이용될 수 있는 개념적 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와 실험조사를 하였으나 이 연구는 Belkao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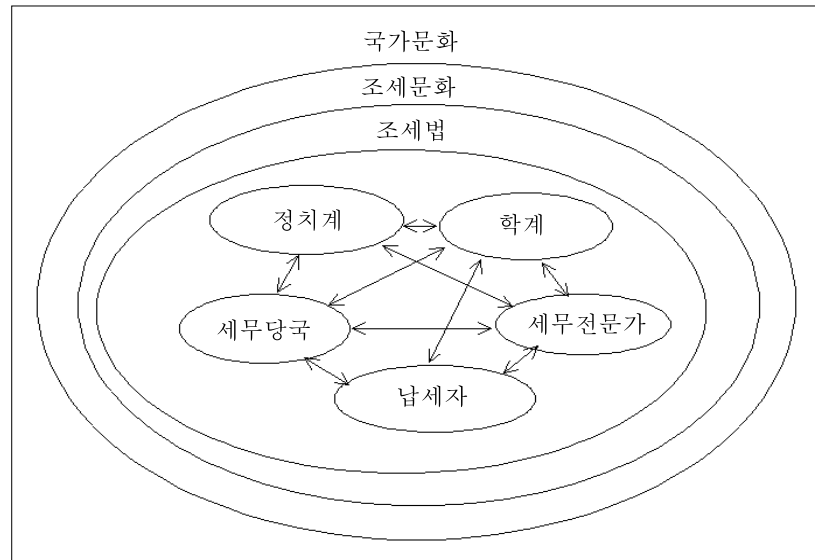
(2004)연구를 확장하고 Hofstede(1980,1991)의 문화적 요인을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통하여 납세순응의 결정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조세윤리(tax morale)는 정부가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납세자들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묵시적이고 심리적인 계약관계(psychological contract)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조세윤리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국민들이 좀 더 성실하도록 행동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순응정도를 높이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내재적 동기인 조세윤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Feld and Frey 2002). 한편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하는 조세환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조세문화(tax culture)라 한다. 조세문화는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세제도 및 행정과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단체들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조세문화는 정치인, 세무당국, 학계, 전문가, 납세의무자의 상호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조세법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조세문화의 구성관계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Nerre 2001).

이러한 조세문화는 해당 국가만의 고유한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납세자들의 탈세수준 등은 모두 조세문화로 인한 결과물이며 국회, 국세청, 재정경제부, 시민단체, 납세자 등 모든 기관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정치적 과정으로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세체계를 입법하고 조세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게 된다. 행정부는 납세자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의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현진권 2005). 납세자와 정부의 사회적 계약으로 정부는 인권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도덕규범을 존중, 다른 국민간의 관계 등을 고양시키고 보호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납세자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조세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며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조세순응수준을 높이고 그 나라의 납세문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1> 조세문화의 구성 관계

효율적 경쟁(effective competition)은 사회적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효율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국민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더 높은 수준의 부를 창출한 납세자들은 기꺼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 경쟁은 조세순응수준을 높일 것이다(Zywicki 2002; Belkaoui 2004).

가설 1 : 효율적 경쟁의 정도가 높은 국가는 조세순응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또 다른 사회적 계약으로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사회는 개인의 부를 창출하려는 동기부여를 강화하여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개인은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유인을 갖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경제적 자유는 조세순응수준을 높여 준다(Ali 1997; Belkaoui 2004).

가설 2 : 경제적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는 국가는 조세순응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자본시장의 발달은 사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업환경을 제시하여 준다. 특히 주식시장이 발달한 사회는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에게 더 쉽고 많은 자본 조달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반면에 기업에게는 주주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경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이 발달 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중요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성실한 납세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속한다. 만약 기업이 탈세를 하였다는 정보가 시장에 나타난다면 기업에 나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소비자들이 탈세 기업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 기업에 대한 제품구매력을 낮추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투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세순응수준을 높여 줄 수 있다(Beck et al 2000; Belkaoui 2004).

가설 3 : 주식시장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국회는 정치적 과정으로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세체계를 입법하고 조세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게 된다. 행정부는 납세자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의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와 정부의 사회적 계약으로 정부는 인권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도덕규범을 존중, 다른 국민간의 관계 등을 고양시키고 보호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납세자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조세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며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은 조세순응수준을 높이고 그 나라의 납세문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 :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을 것이다.

지하경제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공식적인 GNP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하경제의 활동은 세금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징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재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지하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조세부문이다. 지하경제규모가 작아질 경우 세금수입의 증가와 이를 통하여 공급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증가할수록 세금수입은 줄어들며 탈세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순응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5 : 지하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은 낮을 것이다.

한편 Hofstede(1980,1991)는 64개국 160,000명의 IBM직원을 대상으로 작업관련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차원측정을 개발하여 문화모형을 측정하였다. 문화적 가치요소는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집단주의, 남성위주, 장기적 관점으로 구성된다. 이 문화모형에 의하면 사회는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영향은 정보를 활용하는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Hofstede의 문화모형 중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사람들의 자아개념인 “나”또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 사회가 구성원 간에 유지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개념이다. 개인주의는 단단하게 짜여진 사회적 구조를 가지는 집단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느슨하게 짜여진 사회적 구조를 선호한다고 Hofstede는 주장하고 있다. Husted(1999)는 집단주의와 부패(뇌물, 부당이득)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특히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는 가족, 친구, 동료라는 개인의 범주 내에서는 탈법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Hofstede(2001)는 집단주의 사회는 보편적으로 법규범을 견지하지 않으며 그룹내에서는 법과 권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사회는 법과 권리가 한 나라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중시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whistle-blowing)에 대해 관대하며, 사회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법률로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부정에 대해 예외 없이 동등하게 엄정한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조용언 2000). 따라서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회일수록 엄정한 법 준수가 지켜지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 : 개인주의적 성향이 큰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을 것이다.

또한 Hofstede(1980,1991)의 문화요인 중에서 불확실성회피(uncertainty avoidance)는 행위의 결과가 공식규칙을 위반하게 될 경우 그 결과의 모호성(ambiguity)을 수용하는 사회의 집단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한 사회의 규칙지향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회피가 강한 문화는 명문화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경향이 낮은 문화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규범이 의미하는 바를 개인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폭이 넓고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반드시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Hofstede 1991). 또한 강한 불확실성회피는 보다 확실한 관계를 중시하고 따라서 조직이나 사회관계에서 보다 확실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또한 사회적 규칙, 절차의 표준화를 통하여 사회의 질서유지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며 높은 정도(precision)를 요구하며 이탈자, 범법자를 위협시 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7 : 불확실성회피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을 것이다.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한 나라의 제도와 조직에서 힘있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이다(Hofstede 1991). 기업조직에서 힘 있는 상사와 힘 없는 부하직원간의 상호의존관계가 높은 경우 권력거리가 큰 문화이므로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따라서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감정적 거리는 큰 편이어서 부하직원이 직접상사에게 다가가 반대의견을 내 놓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거리는 한 사회의 권의주의적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조용언 2000). 권력거리가 높은 문화에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세무업무 담당자에게 비윤리적 조세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 기업의 세무담당자는 권력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가 지시하는 비윤리적 조세행위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8 : 권력거리가 큰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을 것이다.

남성/여성 성향은 한 문화에서 남녀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로부터 유추된 개념으로 남성성(masculinity)은 자기주장이 강하며 거칠고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반면 여성성(femininity)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삶에 관심을 두는 사회를 지칭한다(Hofstede 1991). 남성적 문화는 거칠고 공격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더욱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여성적인 문화는 공격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나 세법에 대해 더욱 협력적인 행동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9 : 남성성향이 큰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을 것이다.

2.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다음 식과 같으며 종속변수는 조세순응(tax compliance)이며 경쟁법, 경제적 자유지수, 주식시장의 중요성, 정부정책의 투명성, 지하경제규모, 개인주의/집단주의, 불확실성회피수준, 권력거리, 남성/여성 성향 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한다.

$$TC_{i,t} = \alpha_0 + \alpha_1 CL_{i,t} + \alpha_2 EF_{i,t} + \alpha_3 IOEM_{i,t} + \alpha_4 GT_{i,t} + \alpha_5 SE_{i,t} + \alpha_6 DUM_{i,t} + \epsilon_{i,t} \quad (1)$$

$$TC_{i,t} = \alpha_0 + \alpha_1 IND_{i,t} + \alpha_2 UNI_{i,t} + \alpha_3 PD_{i,t} + \alpha_4 MAS_{i,t} + \alpha_6 DUM_{i,t} + \epsilon_{i,t} \quad (2)$$

TC_{it} : 조세순응 CL_{it} : 경쟁법 EF_{it} : 경제적 자유지수 $IOEM_{it}$: 주식시장의 중요성
 GT_{it} : 정부정책의 투명성 SE_{it} : 지하경제규모 IND_{it} : 개인주의/집단주의
 UNI_{it} : 불확실성회피 PD_{it} : 권력거리 PD_{it} : 남성/여성성
 DUM : 유럽, 아시아, 라틴 국가들에 더미변수를 부여함 ϵ_{it} : 오차항

3. 변수 및 표본

종속변수인 조세순응(TC)과 설명변수인 경쟁법(CL), 주식시장의 중요성(IOEM), 정부정책의 투명성(GT)은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2004)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산업경쟁력 평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하는데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틀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에 포함되는 참여 국가는 OECD 가입 국가들을 포함하여 49개국 정도이다.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지표는 286개이고 이중 62개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이다. 그리고 실제 지표의 선정을 비롯한 측정방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용되는 지표들 중 객관적 지표가 118개 항목인데 이를 위해 35개 협력기관에서 조사하고 주관적 지표는 106개 인데 3,678명의 최고 또는 중간관리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적 자유지수(EF)는 Gwartney, Lawson(2006)을 이용하였다. 경제적 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 법적구조와 재산권보장, 자금의 접근가능성, 국제적 무역의 자유수준, 신용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그리고 기업경영의 규제로 구성되어 평가된다. 지하경제규모는 Schneider, F. and R. Klingmair (2004)에서 지하경제규모를 GNP로 나눈 비율을 지하경제규모 변수로 측정하며, 개인주의/집단주의, 불확실성회피수준, 권력거리, 남성/여성 성향은 Hofstede(1980, 1991)을 사용하였다.⁴⁾ 표본수는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표본에 포함된 38개국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4) 지하경제규모는 Schneider, F. and R. Klingmair (2004)에서 2000년의 자료를 5년간의 수치로, 문화적 요인은 연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불확실성회피수준은 Hofstede(1980,1991)의 자료를 5년간 같은 수치로 사용하였다.

<표 1> 표본 국가

| | | | |
|------------------|-------|----------|--------|
| 아르헨티나 | 프랑스 | 말레이시아 | 스웨덴 |
| 호주 | 독일 | 멕시코 | 스위스 |
| 오스트리아 | 그리스 | 네덜란드 | 타이완 |
| 벨기에 | 홍콩 | 뉴질랜드 | 태국 |
| 브라질 ¹ | 인디아 | 노르웨이 | 터키 |
| 캐나다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영국 |
| 칠레 | 아일랜드 | 포르투갈 | 미국 |
| 콜롬비아 | 이탈리아 | 싱가포르 | 베네수엘라 |
| 덴마크 | 일본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핀란드 | 한국 | 스페인 | 총 38개국 |

IV. 검증결과

1. 기술적 통계

종속변수인 조세순응(TC)의 평균값은 4.631이며 최소값은 0.94이며 최대값은 8.557로 값이 높을수록 조세순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법(CL)은 평균 5.909, 최소값 3.040, 최대값 8.595이다. 경제적 자유지수(EF)는 평균 7.138, 최소값 3.992, 최대값 8.787이다. 주식시장의 중요성(IOEM)은 평균 5.876, 최소값 1.660, 최대값 8.740이다. 정부정책의 투명성(GT)은 평균 4.987, 최소값 0.72, 최대값은 8.360이다. 지하경제규모(SE)는 평균 0.223, 최소값 0.087, 최대값 0.526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집단주의(IND)는 평균 50.28, 최소값 12.0, 최대값 91로 나타났다. 불확실성회피(UNI)는 평균 62.18, 최소값 8, 최대값 112로 나타났다. 권력거리(PD)는 평균 53.94, 최소값 11, 최대값 104로 나타났다. 남성성향/여성성향(MAS)은 평균 50.76, 최소값 55, 최대값 95로 나타났다.

<표 2> 기술적 통계

| 변 수 | 평 균 | 표준편차 | 최 소 | 중 간 | 최 대 |
|------|--------|--------|-------|-------|-------|
| TC | 4.631 | 1.827 | 0.940 | 4.825 | 8.557 |
| CL | 5.909 | 1.203 | 3.040 | 6.145 | 8.595 |
| EF | 7.138 | 0.900 | 3.992 | 7.243 | 8.787 |
| IOEM | 5.876 | 1.677 | 1.660 | 6.170 | 8.740 |
| GT | 4.987 | 1.558 | 0.720 | 5.230 | 8.360 |
| SE | 0.223 | 0.099 | 0.087 | 0.195 | 0.526 |
| IND | 50.289 | 25.077 | 12.0 | 49.5 | 91 |
| UNI | 62.184 | 24.055 | 8.0 | 61.5 | 112 |
| PD | 53.947 | 21.210 | 11 | 57.5 | 104 |
| MAS | 50.763 | 19.702 | 5 | 55 | 95 |

· 변수:

TC : 조세순응

IOEM : 주식시장의 중요성

IND : 개인주의/집단주의

MAS : 남성성향/여성성향

CL : 공정거래법

GT : 정부정책의 투명성

UNI : 불확실성회피도

EF : 경제적 자유지수

SE : 지하경제규모

PD : 권력거리

2. 상관계수

<표 3>에서 조세순응(TC)과 경제적 자유지수(EF)의 상관계수는 0.770로 높으며, 경쟁법(CL)은 0.702, 주식시장의 중요성(IOEM)은 0.691, 정부정책의 투명성(GT)은 0.631 순서로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적 모형으로 조세순응(TC)과 개인주의(IND)의 상관계수는 0.363, 권력거리는 -0.451로 나타났고, 반면에 불확실성(-0.483)과의 관계는 예측과는 달리 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자유지수(EF)와 주식시장의 중요성(IOEM)간의 상관계수는 0.752, 경제적 자유지수(EF)와 경쟁법(CL)의 상관계수는 0.678로 대부분의 설명변수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검증 결과 VIF 계수는 1.266~3.029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계수

| 변수 | TC | CL | EF | IOEM | GT | SE | IND | UNI | PD | MAS |
|------|-------|----------|----------|----------|----------|-----------|-----------|-----------|-----------|-----------|
| TC | 1.000 | 0.702*** | 0.770*** | 0.691*** | 0.631*** | -0.659*** | 0.363*** | -0.483*** | -0.451*** | -0.112 |
| CL | | 1.000 | 0.678*** | 0.696*** | 0.657*** | -0.584*** | 0.606*** | -0.311*** | -0.640*** | -0.244*** |
| EF | | | 1.000 | 0.752*** | 0.609*** | -0.705*** | 0.537*** | -0.428*** | -0.546*** | -0.069 |
| IOEM | | | | 1.000 | 0.595*** | -0.578*** | 0.521*** | -0.466*** | -0.397*** | -0.255*** |
| GT | | | | | 1.000 | -0.393*** | 0.398*** | -0.381*** | -0.423*** | -0.240*** |
| SE | | | | | | 1.000 | -0.558*** | 0.274*** | 0.596*** | -0.039 |
| IND | | | | | | | 1.000 | -0.258*** | -0.710*** | -0.028 |
| UNI | | | | | | | | 1.000 | 0.184*** | 0.165** |
| PD | | | | | | | | | 1.000 | 0.127* |
| MAS | | | | | | | | | | 1.000 |

• Pearson 상관계수

• 변수:

TC : 조세순응

CL : 공정거래법

EF : 경제적 자유지수

IOEM : 주식시장의 중요성

GT : 정부정책의 투명성

SE : 지하경제규모

IND : 개인주의/집단주의

UNI : 불확실성회피도

PD : 권력거리

MAS : 남성성향/여성성향

• *** 1%, * 10% 유의수준을 표시함.

3. 검증결과

3.1 모델 1의 검증결과

모델 1의 검증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모델1의 F값은 68.78이며 수정결정계수는 0.7415를 나타내고 있다.

모델 1에서 가설 1의 효율적 경쟁에 대한 회귀계수는 0.5129이며 1%의 유의수준에서 “효율적 경쟁은 조세순응수준을 높일 것이다”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국민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부를 창출한 납세자들은 기꺼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2의 경제적 자유도의 회귀계수는 0.6327로 1% 유의수준에서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결과적으로 조세순응수준을 높여 준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설3의 주식시장의 중요성은 방향은 조세순응도와 정(+)의 관계로 예측

한 바와 같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델 1의 검증결과

| 독립변수 | 기대방향 | 회계계수 | t값 |
|--------------------|------|--------|----------|
| α_0 | ? | -3.527 | -3.38*** |
| CL | + | 0.5129 | 5.14*** |
| EF | + | 0.6327 | 4.27*** |
| IOEM | + | 0.1076 | 1.39 |
| GT | + | 0.2106 | 3.35*** |
| SE | - | -5.067 | -4.96*** |
| Adj-R ² | | 0.7415 | |
| F-value | | 68.78 | |

$$TC_{i,t} = \alpha_0 + \alpha_1 CL_{i,t} + \alpha_2 EF_{i,t} + \alpha_3 IOEM_{i,t} + \alpha_4 GT_{i,t} + \alpha_5 SE_{i,t} + \alpha_6 DUM_{i,t} + \epsilon_{i,t} \quad (1)$$

· 변수의 정의:

TC : 조세순응

CL : 공정거래법

EF : 경제적 자유지수

IOEM : 주식시장의 중요성

GT : 정부정책의 투명성

SE : 지하경제규모

DUM : 유럽, 아시아, 라틴 국가들에 더미변수를 부여함.⁵⁾

· *** 1%, * 10% 유의수준을 표시함

가설4의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회귀계수는 0.2106으로 1% 유의수준에서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조세순응수준을 높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정책의 투명성(GT)이 높은 사회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신뢰성이 높을 것이며 결국 조세순응도를 높일 것임을 실증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5의 지하경제규모(SE)의 회귀계수는 -5.067로 1% 유의수준에서 지하경제규모는 조세순응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경제규모가 증가할수록 세금수입은 줄어들며 탈세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순응수준이 낮아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조세순응을 증가시키는 결정요인으로 효율적 경쟁법의 수준, 경제적 자유도의 수준, 정부정책의 투명성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조세순응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증가할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아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5) 모형에는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으나 표에서는 더미변수를 표기하지 않았다.

3.2 모델 2의 검증결과

<표 5>에 모델 2의 Hofstede의 문화요인에 대한 검증결과가 나타나 있다. 모델2에서는 Hofstede(1980, 1991)의 문화요인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IND)와 불확실성회피도(UNI), 권력거리(pd), 남성/여성 성향 변수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5> 모델 2의 검증결과

| 독립변수 | 기대방향 | 회귀계수 | t값 |
|--------------------|------|---------|----------|
| α_0 | ? | 7.008 | 7.70*** |
| IND | - | -0.0023 | -0.27 |
| UNI | + | -0.0263 | -4.73*** |
| PD | - | -0.0339 | -4.46*** |
| MAS | - | 0.0013 | 0.24 |
| Adj-R ² | | 0.3952 | |
| F-value | | 18.65 | |

$$TC_{i,t} = \alpha_0 + \alpha_1 IND_{i,t} + \alpha_2 UNI_{i,t} + \alpha_3 PD_{i,t} + \alpha_4 MAS_{i,t} + \alpha_6 DUM_{i,t} + \epsilon_{i,t} \quad (2)$$

· 변수의 정의:

TC : 조세순응 IND : 개인주의/집단주의 UNI : 불확실성회피도

PD : 권력거리 MAS : 남성성향/여성성향

DUM : 유럽, 아시아, 라틴 국가들에 더미변수를 부여함⁶⁾

· *** 1%, * 10% 유의수준을 표시함

검증결과 모델 2의 F값은 19.65, 수정결정계수는 0.395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가설 6의 개인주의/집단주의(IND)의 회귀계수는 -0.023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다는 가설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가설7의 불확실성회피(UNI)의 회귀계수는 -0.0263으로 1%의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예측한 바와는 반대방향을 띠고 있다. 가설8의 권력거리(pd)의 회귀계수는 -0.0339로 1% 유의수준에서 권력거리가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8의 남성지향적인 국가일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다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Hofstede의 문화요인 중 권력거리가 큰 사회 즉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조세순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거

6) 더미변수의 결과는 표에 나타나지 않았다.

리가 높은 문화에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세무업무 담당자에게 비윤리적 조세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을 때 기업의 세무담당자는 권력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가 지시하는 비윤리적 조세행위에 따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준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준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Hofstede(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준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준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세준응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적인 요인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5년간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 경쟁, 경제적 자유, 정부정책의 투명성은 조세준응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하경제규모는 조세준응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문화적 요인으로 권력거리와 불확실성회피성향이 클수록 조세준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준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납세준응도를 높이기 위한 거시적 대안으로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준응의 강제적 요인(조세회피에 대한 벌칙의 정도, 세무조사비율)과 조세법의 차이 등에 관련된 다른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자료의 이용한계로 인하여 지하경제규모, 개인주의/집단주의, 불확실성회피수준 등과 같은 변수의 측정연도가 다른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참고문헌

1. 조용언(2000), “국제조세의사결정에서 문화변수의 의미와 역할,” 세무와회계저널, pp.243~2760.
2. 현진권(2005), “한국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제3호, pp.147~174.
3. Ali, A. M.(1997), “Economic freedom, democracy and growth”, *Journal of Private Enterprise*. 13, pp.1~20.
4. Allingham, M. and A. Sandmo(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November), pp.323~338.
5. Alm, J., G. McClelland and W. Schulze,(1992), “Why do people pay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June), pp.21~381.
6. Andreoni, J., Erard, B. and Feinstein, J.(1998),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pp.818~860.
7. Beck, Thorsten, Ross Levsine, and Norman Loayaza(2000), “Finance and the source of grow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pp.261~3000.
8. Belkaoui, A. R.(2004), “Relationship between tax compliance internationally and selected determinants of tax mor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3, pp.135~143.
9. Choi, Jong Hag and T. J. Wong(2002), “Audit markets and legal environment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Working Paper*,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0. Cowell, F. A.(1990), “Cheating the government”, *The Economics of Evasion*, MIT Press, Cambridge.
11. Falkinger, J. and H. Walther(1991), “Rewards versus penalties: 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Quarterly* 19, pp.67~79.
12. Feld, L. P., and Frey, B. S.(2002), “Trust breeds trust: How taxpayers are treated”, *Economics of Governance* 3, pp.87~99.
13. Graetz, M. J. and L. L. Wilde(1985), “The economics of tax compliance: Facts and fantasy”, *National Tax Journal* 38, pp.355~363.
14. Gwartney, Lawson(2006), World Value Survey.
15.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6. _____(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17. _____(2001), *Culture's consequence: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8. Husted, B. W.(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 pp.339~359.
19. Kinsey, K.(1986), "Theories and models of tax cheating", *Criminal Justice Abstracts(September)*, pp.403~425.
20. Nerre, B.(2001), "The Concept of Tax Cultur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21. Schneider, F. and R. Klingmair(2004),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o we know?", *Working Paper*.
22. Torgler, B.(2004), "Tax morale in Asian countri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15, pp.237~266.
23.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0-2004).
24. Zywicki, Todd J.(2002), "The rule of law, freedom and prosperity", *George Mason Law and Economic, Research Paper No.* pp.2~20.

Abstract

The Study of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Choi, Heon-Seob*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and relates these differences to selected determinants of tax morale and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f data from 38 countries during 5 years(2000-2004) indicate that tax compliance is highest in countries characterized by high economic freedom, high effective competition laws, high government transparency, low shadow Economy, and low power distance. It shows that a powerful deterrent to tax evasion is the creation of a tax morale. Where individuals can exercise their economic rights in terms of economic freedom, important equity market and effective competition laws, in a safe environment that improves their quality of life, they are more prone to view tax compliance as less of a burden and more of a citizenship duty. Our results indicate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cultural values when designing tax compliance legislation and investigating possible behavior irregularities.

Key Words : Tax Compliance, Tax Morale, Cultural Value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